

‘최고위원 도전’ 민주 김영호 의원, 전북서 핵심공약 제시

“당 대통합, 전북에서 다시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3선)이 5일 전북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대통합은 전북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당내 갈등 해소와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3번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날 “제 아내가 익산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졸업해 전북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며 자신이 ‘전북의 사위’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북이 하나 되고 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대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뚝뚝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끝없는 계파 갈등 속에서 동지가 적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인 고 후보 김상현 선생의 통합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 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며 “삼선 중진의 책임감으로 흔들리는 당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원칙을 회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



당내 갈등 해소 내걸어
전북 정치권 갈등 언급
“김관영 도지사 제명
매우 이례적인 일
복당문제 책임있게 추진”

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이 흔들리고 분열이 시작된 곳에서부터 통합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북 정치권의 갈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다”며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수많은 당원과 도민 모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직 도지사였던 김관영 전 지사의 제명 과정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나 경선 후보 자격 제한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며 “공천을 앞두고 현직 도지사를 제명한 것은 많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민주당 내부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고 상처 입은 동지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며 “당시에는 오랜 동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지금도 많은 전북도민들은 절차가 충분히 공정했는지, 동지를 대하는 방식이 과연 민주당다운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갈등을 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내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김 전 지사의 복당 문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곳곳에서 역풍한 사정으로 당을 떠나야 했던 당원들의 문제도 함께 살펴겠다”며 “민주당은 특정 계파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당원의 정당이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와 원칙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동지가 적어져서는 안 된다”며 “통합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 대통합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며 “상처 입은 동지의 손을 다시 잡는 것, 그것이 민주당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며 그 첫걸음을 전북에서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당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공정을 다시 세우며 통합으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영호에게 전북도민과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당권주자들, 이재명정부 제1과제 질문에

정청래·송영길 “부동산”
김민석 “당정관계 안정”

내란 종식 기준은…鄭 “정당 해산” 宋 “총선 승리” 金 “개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5일 이른바 ‘내란 종식’의 기준에 대해 각기 다른 답을 내놨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KBS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을 외친다고 내란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으로 승리해야 내란 종식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즉 정권 재창출, 총선 승리로 해야 내란 종식이 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치렀던 선거에서 이진숙, 김태규, 한동훈, 추경호 이런 내란 관련 세력들이 전부 다 부활해서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 총선 승리가 내란 종식의 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후보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다. 법적으로 지금 내란 청산 작업 중에 있다”며 “그러나 정신적인 내란이 부분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하지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윤여개인을 주장하고 있다. 사 이버상에서 실제로 내란을 일으킨 일도 실제로 많이 있다”며 “따라서 윤여개인 내란 옹호정당을 실제로 해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후보는 “결국 제도의 문제다. 주모를 했던 세력 중에 하나인 방첩사를 정리해서 개헌한다든가 또는 헌법에 관련되어 있는 계엄 관련한 조항을 바꿔내는 개헌까지 이루어 낸다든가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의식과 또 내란을 옹인하고 찬양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모든 것은 지금 송 후보가 말한대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 등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제1과제는 무엇이고 ‘최대 장애물

은 무엇인가’란 공통 질문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 문제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거대하게 밀려오는 위협스러운 파도”라며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근대 공급을 많이 하려면 실제로 집을 많이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과감하게 행정규제 이것도 철폐하고 금융재정 규제 완화 이런 것도 하도록”이라며 “실제로 그린벨트리든가 군사보호시설 등을 풀어서 실제로 지장이 없다면 이거 빨리 집을 지어야 된다. LH도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제1과제는) 부동산 문제다. 공급의 속도가 필요하디”며 “동시에 공급인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실 수요자가 실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저는 ‘누구나프로젝트’로 그러한 금융지원,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사다리 만들어준다”며 “제가 당대표에 복귀하면 바로 실시할 것이다. 부동산PM을 완화시켜서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 시키겠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 지방정부가 활성화 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당의 안정과 당정관계 안정이다 생각한다. 당의 리더십이 안정적이지 않고 당정관계 안정적이지 않으니가 결국 선거 흔들렸고 선거 흔들리니까 중지가 흔들리고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과 주도력이 흔들리게 돼 있다.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더 이상 ‘병정대장’ 이런 이야기 듣지 않는 그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걸 협력할 수 있는 역량있는 지도부로 바꿔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디”고 했다. /뉴시스



‘전북 스포츠 우정의 선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전북체육중·고등학교에서 Re: Play Together, 전북 스포츠 우정의 선물’ 해외 발송식을 열고, 짐바브웨·케냐·나미비아에 전달할 스포츠 용품을 발송했다.

군산 대야 초산마을 주민들, “유기동물보호소 조속 이전을”

“일부 시의원들이 매입 압박… 주민 피해 없도록 시가 나서달라”

군산유기동물보호소가 소재한 대야면 초산마을 주민들이 군산시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던 유기동물보호소(대야면 보덕리 830번지)의 지정을 취소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지(나포면 육곤리 일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야면 초산마을 주민들은 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의원들이 기존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던 유기동물보호소 부지 매입을 압박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군산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던 유기동물보호소와 동물 체험시설로 인해 소음은 물론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

어 왔다”며 “그동안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해 온 만큼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위해 이전하려는 부지로 즉각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가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찾았고 매입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원들의 압력으로 행정이 흔들린다면 이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김만호 기자

민주 김의겸 의원, 오늘

K피지컬 AI강국 실현 포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로보트라운드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KIAT)이 후원하며,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로보트라운드’ 구축 전략과 제조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피지컬AI 산업 육성 및 미래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현대차와 다임러차의 발제에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지컬AI 정책과 규제 개선, 산업육성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만호기자·군산=김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산림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 단위의 시·군·구 산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자문기구인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시도·시군구별 산림정책위원회로 확대해 지역 산림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산림 공익기능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산림재난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 정책 마련, 산림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 반영 노력 의무도 포함했다. /이만호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청, 직원 소통공간 ‘마음쉼터’ 개소

새만금개발청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담공간인 ‘마음쉼터’를 개소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5일 청사 2층에 마련한 직원 상담공간 ‘마음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호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한 간부와 노동조합 관계자, 직원들이 참석해 상담실 조성 경과를 공유하고 명패 제막식과 시설 관람을 진행하며 직원 중심의 소통 문화 확산의지를 다졌다.

‘마음 쉼터’는 직원들이 업무와 조직 생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시 소통 공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인사·복무 관련 고충, 조직 생활에서의 애로사항, 심리적 어려움 등을 상담하며 필요시 전문 기관과 연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상담실은 약 25㎡ 규모로 조성됐으며,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갖췄다.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운영해 이용자의 신



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에는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조직 운영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만호기자·군산=김만호 기자

“이서 묘포장 부지, 피지컬AI 담아낼 최적 입지”

윤수봉 도의원, 유휴부지 활용 방안 점검·현장 애로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지난 4일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이서 묘포장 부지를 방문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과 박지원 산림생태연구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가운데 이서 묘포장 부지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서 묘포장은 지난 1978년 2월 유실수와 조경수 묘목을 생산·보급하기 위해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 약 6만 평(20,497㎡) 규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현재 관련 기능 대부분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사실상 유휴부지로 활용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다. 그동안 해당 부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전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지컬AI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미래 전략은 모두 충분한 개발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서 묘포장은 전 구간이 도유자인 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까지 크게 향상된 만큼 전북



의 미래 전략사업을 담아낼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원 이후 이서 묘포장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생태문명원 조성, 예코 힐링가든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검토되어 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구상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민선9기 도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장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냉방시설, 휴게시설 확충 등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만호기자